

전북자치도, 기후테크 스타트업 적극 육성 나섰다

‘기후테크산업, 지역 혁신성장 중심축으로 도약’

기후테크산업이 지역 혁신 성장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탄소중립 실현과 함께 녹색 기반의 미래먹거리 창출 잠재력이 높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는 4일 기후테크 산업 중심지 도약을 위한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기후테크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이 분야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기후테크, 미래먹거리 핵심으로 부상
기후테크는 기후와 기술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범위의 기술을 뜻한다. 통상적으로 탈탄소 분야 전체를 지칭하는 핵심키워드로 통용된다. 우리나라 기후테크산업의 5대 핵심 분야로는 △클린테크(재생에너지) △카본테크(탄소포집) △에코테크(자원순환) △푸드테크(대체식품) △지오테크(우주기상) 등이 꼽힌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계 각국의 기후테크 육성 의지는 뚜렷하다. 민간 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술의 진보도 높은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딜로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기후테크 경진대회 · 현장 실증 등 적극 육성 스타트업 육성 강화로 경제 · 환경 · 일자리 확보

기후 시장은 2022~2032년 연평균 24.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2021년 연평균 성장률은 17.5% 수준이었다. 정부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해 제4차 전체회의에서 145조 원 투자를 핵심으로 한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2050 탄소중립 추구하고 동시에 유니콘 기업 10개, 신규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밑그림이다. 그동안 민간 주도의 산업을 민관협업형으로 확대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다. 현재 국내에는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은 전무한 상황이다.

▲기후테크 산업 선도지역으로 도약
전북자치도 역시 기후테크 산업을 지역 혁신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정책 고도화에 나섰다. 기후테크 산업 인프라 확장과 함께 기술의 주체인 스타트업 육성 강화, 테스트베드 조성 등을 동시에 추진한다. 현재 전북자치도는 기후테크 산업

의 핵심인 △지속가능 에너지 △배터리 △모빌리티 인프라를 두루 갖춘 지역으로, 녹색 성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지속가능 에너지 분야의 경우 새만금에 30조 원을 투입해 7GW급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 중이고, 스마트 전력망과 수소 등 에너지산업 테스트베드로서의 입지도 다지고 있다. 이 같은 생태계 구축은 국내 최초의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선정으로 이어지며 RE100 선도지역으로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배터리 분야는 지역 기후테크 산업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2023년 새만금이 국가이차전지특화단지로 선정된데다 약 14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도 이뤄졌다. 이에 더해 새만금은 향후 배터리 관련 핵심광물이 저장되는 수직조원 규모의 비축기지로 성장해, 기후테크 관련산업 파생에 활력이 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빌리티 분야는 지속가능 에너지·배터리 분야와 밀접하게 잇달아 있다. 이들 산업을 바탕으로 한 수소

와 에너지 저장장치(ESS), 폐배터리 등이 현재의 자동차·조선 산업을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으로 전환·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전북자치도는 바이오, 인공지능(AI), 로봇 등을 포괄한 푸드테크 분야에도 투자와 육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에도 속도를 내며 기후테크 산업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방침이다.

▲기후테크 창업 허브를 꿈꾼다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강화한다. 전북자치도는 폭발적 성장이 기대되는 도내의 스타트업을 발굴·유치하고, 중견·대기업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자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다. 먼저 전북자치도는 민선 8기 동안 조성하는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책과 연계할 예정이다. 2024년까지 결성된 펀드는 약 6,900억원 규모로 민선 8기 내 약 4,000여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기후테크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SWITCH(전환)라는 명칭으로 기후테크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브랜드화하며 관련기업 유치활동 확대, 중견·대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개최된 경진대회에서는 관련기업과 국책연구기관, 투자사 등이 큰 관심을 보였다. 지난 9월 열린 기업가치 100억원 이상의 성장단계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스타트업 ‘토트’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대체하는 자동차 솔루션을 개발해 새만금에 입주한 성일하이텍과 협력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세 번째로 전북자치도는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등 실증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나간다. 기후테크 분야의 기술 검증과 규제, 공공구매, 민자투자 등 스타트업에 필요한 단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기후테크 기업을 집중 육성해 미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유망 기후테크 기업들이 지역에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탄소중립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토론회

도의회 탄소중립특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익산4)는 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교육원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히 전주시의 운영 사례를 참고해 개소를 앞둔 익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성공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한정수 위원장의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병도 국회의원의 축하영상에 이어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임성진 전북도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의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에서는 김형훈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장이 ‘익산시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주제로 익산시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현황을 설명한 뒤 지역 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남정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탄소중립지원센터 현황 및 이슈’를 주제로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상의 한계를 분석하고 검토 사항을 살폈다. 이어서 진행된 지정 토론회에서는 좌장인 한정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김진규 익산시의원, 이승환 전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이진홍 희망연대 사무국장이 토론회자로 참여해 지역별 탄소중립 정책 실행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 또 지방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짚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만호 기자

민주 도당 직능위원회
현장 중심 활동 본격화

비상계열 등의 여파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 때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직능위원회가 어려움 해소에 발 벗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직능위원회(위원장 최유)가 도내 직능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중심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직능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각 지역위원회를 순회하며 직능위원장 및 직능위원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지역 직능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순회 면담은 윤석열 내란사태 이후 심각해진 경제 상황 속에서 각 직능단체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듣고,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면담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은 향후 도내 직능인 지원 방안 수립에 적극 반영될 계획이다.

특히, 직능위원회는 각 지역 직능위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정당 활동의 현황과 고충을 공유하며, 찾아가는 소통을 통해 당원의 의견을 정책과 민생활동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당 직능위원회는 진정한 당원중심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 최유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직능위원장은 “이번 순회 면담을 통해 지역 직능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경제와 직능단체의 활성화를 돕겠다”며 “앞으로도 직능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정부·전북, 추경 조속 편성을”

도의회 예결특위 “정부 추경 지연 시 전북 재정운용 차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최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가 재정과 연계된 지방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신속히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정부 차원의 추경 논의가 지연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추가 재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한 긴급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늦어진다면 지역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 위원장은 “정부 추경이 지연될 경우, 중앙재정 의존도가 높은 전북의 경우, 지역의 경제 회복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는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하고, 지방정부 역시 자체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한 만큼, 전북도 차원의 추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추경 편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도 차원의 추경 논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 및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를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농외소득 금액 기준 5000만원 이상 범위

민주 윤준병 의원,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개선법’ 대표발의

현행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기준의 하나인 농외소득 기준이 지난 2007년 당시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을 중심으로 정해진 이후 16년째 동일한 기준이 유지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합리한 농외소득 기준을 바로 잡아 더 많은 농민이 공익직불금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4일,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농외소득 금액 기준을 기존 연 3,70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개선하는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등에서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의 하나로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연 3,7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기준은 지난 2007년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이 3,674만원임을 반영해 2009년에 정한 기준으로, 제도 도입 이후 가구 연평균소득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23년 기준 연평균 가구소득은 7,185만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외소득 기준은 16년째 동결돼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소득 기준이 계속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화해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외소득 금액의 기준을 5,0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불합리한 소득 기준의 적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통계를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기준을 다시 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만호 기자 · 정음=김대환 기자



4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새로운 길: 임무중심 R&D’를 주제로 전북 백년포럼 제25강이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 이남호 전보연구원장,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무중심 R&D로 미래 혁신 지향해야”

전북 백년포럼 제25강

기술 패권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과학기술 공공-민간 역량결집을 위해 임무지향 R&D 혁신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미래 신산업 육성에 힘써 온 전북은 대학, 혁신기관, 연구기관 등 다양한 혁신자산을 연결한 생태계 소프트웨어가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4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새로운 길: 임무중심 R&D’를 주제로 전북 백년포럼에서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은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지정

학적 갈등 확대로 과학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며, 트럼프 2.0 시대 보호무역 정책이 강화되면서 총수출액 최대 448억 달러 감소가 전망되는 등 국내 타격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또한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 요소를 넘어 국제 협상의 핵심 카드로, 우리나라의 미래 협상력 제고를 위해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 원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공공-민간 역량결집의 키워드로 임무지향 혁신정책을 틀며 이를 위한 과학기술 R&D 모델로 ‘임무중심 R&D’를 제시했다. 정부가 명확한 임무 설정, 부분별 협력 조정, 민간 역량

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민주 박희승 의원, 정책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4일 오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2간담회의실에서 ‘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희승 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박원)가 주관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고려대학교 김운태 교수가 좌장으로, 전국 대학교 이미진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이미영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회자료는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종립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부위원장,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도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이 참여했다. /이만호 기자